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38391 대여금
원 고 A 새마을금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3. 12. 20.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40,765원과 그 중 24,143,555원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값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3. 3. 12. C으로부터 ***시 **동 ***-*** *****빌 제*층 제***호를 매수하면

서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2,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고, 추가로 원고로부터 부족한 매매대금 1,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03. 4. 3. 원고와 사이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금 3,500만 원, 이자율 연 9.5%, 연체이율 19.8%로 하는 가계일반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03. 4. 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2003. 4. 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C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를 마쳤고, 추가로 대출금 1,500만 원에 관한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2003. 12. 30.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4.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E이 최고가매수인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1. 12. 23. 배당금으로 8,811,986원을 지급받는 등 위 대출원금 중 합계 10,856,445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2013. 3. 4.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원금 24,143,555원과 2011. 12. 26.부터 2013. 3. 4.까지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5,697,210원의 연체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9,840,765원과 그중 대출원금 24,143,5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2003. 5.경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E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인 2006. 4.경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 상인으로 영업을 위하여 대출받을 것이 아니므로 그 대출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황순교